

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

2013. 3. 13.
윤복남 변호사
법무법인(유)한결

목차

- 인터넷 거버넌스는 무엇인가?
 - 왜 인터넷주소가 문제되는가?
 - ICANN의 역할과 조직구조
-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
-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현황
 - 실제 정책수립의 사례
 - 정부주도형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
- 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과제(제언)

인터넷 거버넌스란?

-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
 - IP주소, 도메인이름에 관한 운용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
 - ICANN/IANA/Root Server
-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
 - 인터넷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, 의사결정 과정
 - WSIS & IGF, WCIT etc.

왜 인터넷주소가 문제되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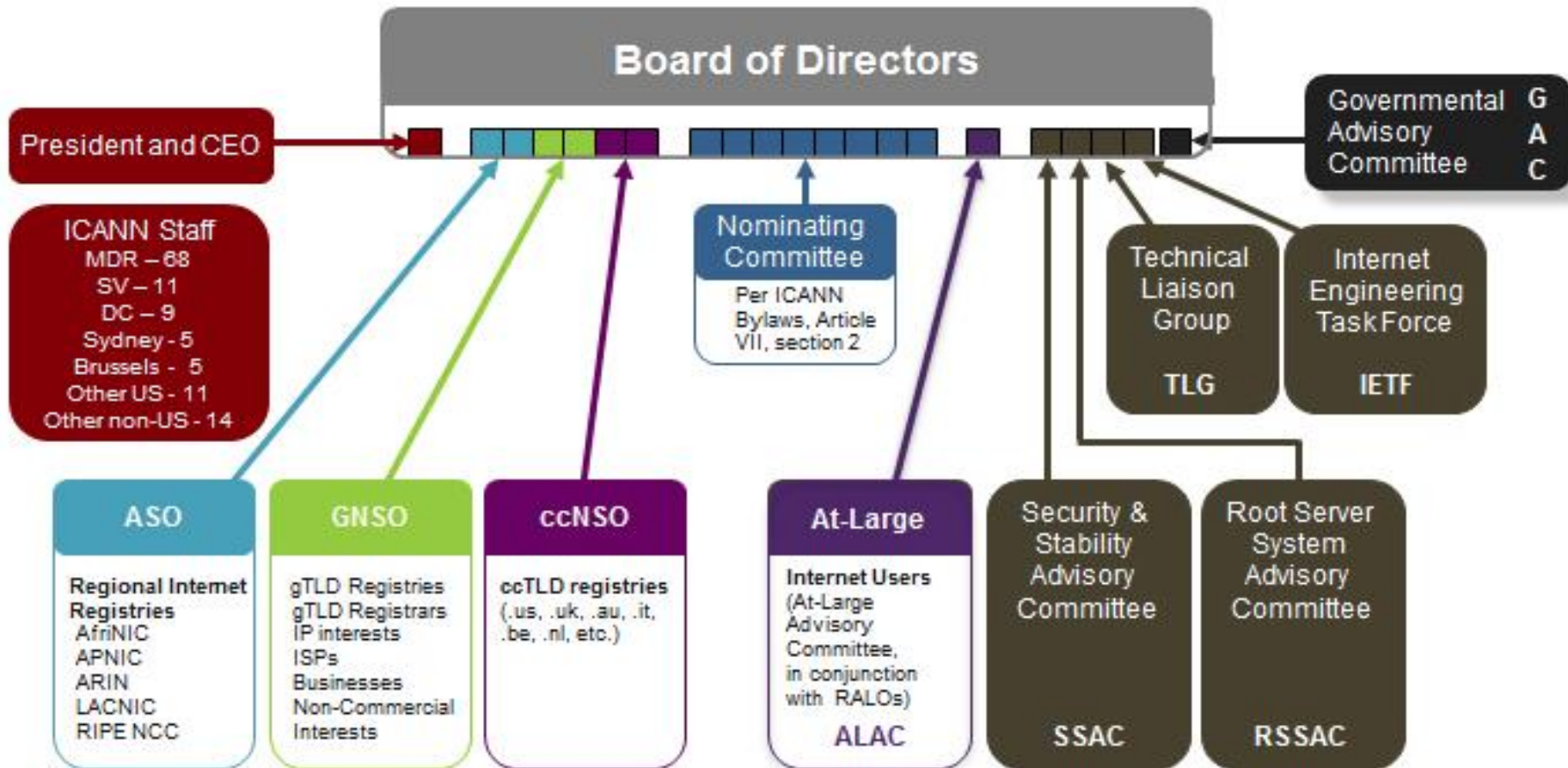
- 인터넷 연결망(Network)의 특징
 - IP주소, 도메인이름을 통한 연결
 - 전세계적 단일성(오직 1:1 대응) 필요함
 - DNS 서버관리자들이 Root Server에 자발적 연결
- 인터넷주소의 특징
 -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부각
 - 다른 인터넷 이슈와의 연관성, 정책의 기준
 - ex) 접속차단(중국 v. 구글), 보안/해킹, 스팸방지

ICANN에서 무엇을 결정하는가?

- Root Server 운영 (IANA)
- 신규 최상위도메인 - 등록운영기관 / 신규등록정책, 사업자 승인, 계약
- 기존 최상위도메인 - 등록사업자 승인, 계약
- 도메인분쟁정책 - 분쟁조정사업자 승인
- 국가최상위도메인 지정, 계약
- 도메인등록정보(Whois) 공개정책

ICANN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?

ICANN Multi-Stakeholder Model



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

- 2004년 주소자원법 이전
 - 1986 KAIST
 - 1994 한국전산원
 - 1999 한국인터넷정보센터(KRnic)
/ NNC(인터넷주소위원회)
- 2004년 주소자원법 이후
 - 2004 특수법인 NIDA(한국인터넷진흥원)
 - 2009 정부산하기관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

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현황

- 방송통신위원회(정보통신부) : 정책결정
 -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자문 (1년 4회+ α)
-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: 정책제안, 집행
 - 인터넷주소정책포럼 자문(2009~2012)
-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: "IGF-Korea"
 - 주소인프라분과에서 KISA 자문 역할(2012~)

실제사례 (1) : 2단계 영문도메인 개방(2004)

- 2단계 영문도메인 개방이란?
 - 개방 전에는 '.co.kr', '.or.kr' 등 제한적 2단계 사용
 - 'hankyul.kr'이 가능한지 여부
 - 주요이슈 : 이용자 편익증대인가? vs.
이용자 혼란 야기 및 기존등록자 부담 증가인가?
- 인터넷주소위원회/도메인이름분과위원회
 - 도메인이름분과위원회(NameCom)에서 2차의 공청회를 거쳐서 기존 공공영문도메인 유지안(개방반대)을 확정
 - 인터넷주소위원회(NNC)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함
- 2004년 주소자원법 통과 이후
 - 정보통신부/한국인터넷진흥원 체제 후 2단계 개방 결정

실제사례 (2) : ‘.한국’ 등록정책(2010)

- 한국인터넷진흥원
 - 인터넷주소정책포럼 : 등록정책, 등록유보어WG
 - 외주발주 : 한국소비자원에서 등록정책 실무
 - 주요이슈 : ‘.한국’과 ‘.kr’이 독립된 주소인가?
어떤 도메인이름을 등록유보어로 할 것인가?
- 방송통신위원회
 - 대부분의 등록정책은 그대로 수용함
 - 공청회에서 ‘비윤리적 단어’(자살방조, 조건만남 등) 47개를 신규 등록유보어로 제안함
 - 인터넷주소정책포럼의 재고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

정부 주도형 인터넷 거버넌스 평가

- 장점
 - 인터넷 공공성 고려, 관리책임 분명함
 - 정책형성과정의 대표성, 책임성
 - 국가간 국제활동에서 위상 강화
- 단점
 -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미약
 - 정책논의과정과 별개의 최종의사결정 가능함
 - 국제인터넷활동(주로 민간분야) 약화

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과제(제언)

- 먼저, 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**Consensus**(의사합치)가 필요함
 - Open
 - Bottom-up process
 - Multi-stakeholder
-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강화
 -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강화 및 제도화
 - 각 분야별 참여폭의 확대
(NGO, 이용자, 기술전문가, 정책전문가, 업계 등)

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과제(제언)

- NGO, 이용자(단체) 스스로의 관심 제고 필요
 - 인터넷주소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관심이 적음
 - 다양한 활동 필요(국제동향 파악, 정부정책의논 참여, 이슈 제기 등)
 - 인터넷주소 관련 국내외 회의 참관
- 법·제도적 뒷바침
 - 주소자원법의 개정(민간참여 확대 방향 / 예외적 정부개입)
 - ex) 호주통신법 : 주소관리자를 결정하되, 서면지시, 공공적 중요성, 사전에 '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' 협의 후 지시가능
 -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민간참여 확대 제도화
 - ex) ITU 회의 이전에 민간부문 의견 수렴
 - KISA에 대한 일정한 자율권 부여, 주소관리기관 경쟁체제 등
 - 민간국제활동 지원에 대한 일관적, 장기적 정책 마련